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874
----------	-----

제안연월일 : 2001. 7.

제안자 :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
을위한특별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1년 2월 채택한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 중단촉구결의문'을 상기하면서 일본국이 우리 나라의 진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외면한 데 대하여 깊은 실망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국 정부와 일본국 국민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참회와 이에 바탕을 둔 피해국과의 진정한 화해 없이는 일본국이 영원히 전범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1995년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종전50주년 기념 특별담화」와 1998년의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부합하는 성의 있는 태도로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일본 사회의 국수주의적 경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국 정부가 피해국 국민들의 일관된 요구를 외면한 채 국수주의적 사관에 기반을 둔 역사왜곡교과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피해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일본국민에게도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3. 정부는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일본문화 개방의 중단, 일본 천황 호칭 변경 여부의 검토, 고위급인사 교류의 중단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신의 침략사실을 은폐·왜곡하고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국은 국제 사회의 지도적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4.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크게 훼손되게 되는 1998년의 「21세기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 여부 등 한·일관계 전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5. 정부는 UN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적 대일비판여론을 확산시키고, 과거 일제의 침략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은 국가 및 국제적 양심세력 등과 연대하여 일본국의 역사왜곡교과서 시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6. 정부는 우리의 국사교육 및 국사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일본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역사왜곡을 주도한 일본국민의 대한민국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하는 등 일본국의 역사왜곡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제안이유

2001. 4. 3 검정을 통과한 일본국의 중학교용 역사교과서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피해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수주의적 사관에 의한 왜곡된 역사기술로 근린제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있음.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검정 통과전인 2001. 2. 28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문」
을 채택하여 일본국에 전달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는 검정을 통
과한 역사교과서의 왜곡기술과 관련하여 2001. 5. 8 일본국 정부
에 35개 항목에 이르는 수정요구를 제기하는 등 왜곡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그러나 일본국 정부는 2001. 7. 9 피해국의 왜곡시정요구에 대
한 문부과학성의 검토결과 발표를 통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피
해국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피해국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을 대
변하여 일본국에 역사왜곡의 시정을 재삼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일본국의 역사교과
서 왜곡시정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를 내외에 밝히고자 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임.